

국힘 “군 장병 처우 개선”… 민주 “채상병 특검 수용”

국군의날에 현안 놓고 신경전
여 “군인사법 개정안 등 노력”
야 “친일 인사 임명 사죄해야”

여야는 1일 건군 제76주년 국군의날을 맞아 장병에 대한 감사를 표하면서도 현안에 대해선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군 장병과 국가유공자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을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

야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날 자유대한민국 번영의 기틀을 만들어주신 호국영령께도 머리 숙여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장병들의 더 나은 복무여건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모든 이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건한 안보는 튼튼한 국방력의 토대 위에 세워진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정예 선진강군 육성과 한미동맹 강화, 장병 복무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국가를 위해 희생고 헌신하신 분들이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받고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특히, 순직 군인의 추서된 계급에 따라 유족들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과 ‘군인재해보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더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야당은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의 수용과 ‘친일 역사관 인사 임명’을 거론하며 정부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고한다”며 “누

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안보태세는 군의 자산들을 시가 행진에 동원해 자랑한다고 갖추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우리는 전역일이 지났음에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해병대원의 희생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며 “진실 규명을 겹겹이 가로막고 있는 세력에 대한 분명한 처벌만이 사고의 재발을 막고 희생 당한 젊은 청년의 넋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젊은 해병대원의 죽음 앞에 단 한 톨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특검법 수용 의사를 밝히고, 친일 매국 인사들에 대

한 임명을 사죄하는 일이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가 국군의 날 해야 할 임무임을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윤 정부는 이념 전쟁을 앞세운 것도 모자라 일본의 침략을 미화하는 가치관을 지닌 인사, 독립운동의 역사마저 부정하는 인사들을 국가기관 곳곳에 임명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군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국군의 가장 귀한 자산인 장병들의 안전과 인권 그리고 역사를 지켜내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윤 “北 핵사용 기도시 바로 정권 종말의 날”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사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만약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그 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북한 공산 세력이 6·25 전쟁을 일으켰을 때 우리 군은 피를 흘려 싸워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냈고 지금도 북한의 끊임없는 위협과 도발에 단호하게 맞서며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직 권력 세습만을 추구하며 주민들의 참담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쓰레기 풍선, GPS 교란 공격과 같은 저열한 도발을 자행하더니 급기야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통일마저 부정하고 있다. 더욱이 러시아와의 불법 무기 거래로 국제사회의 규범에 역행하며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 정권은 지금이라도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망상에 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과 이에 기반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해나갈 뜻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창설된 전략사령부의 역할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전략사령부 창설을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해왔다”며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든든하게 지키는 핵심 부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와 강한 군대는 국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군이 흔들림 없이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전략사령부 부대기수여, 열병, 훈장·표창 수여가 이어졌고, 기념사 후에는 ‘국토수호 결의’와 함께 전장병 및 장비 분열이 뒤따랐다.

서울=김선욱 기자

국민의힘 광주시당, 11월까지 ‘정치대학’ 운영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광주의 현주소를 들여다보고, 미래를 제시하는 ‘정치대학’을 개강한다고 1일 밝혔다.

정치대학은 광주시민과 당원 및 청년, 대학생들의 정치 관심도와 참여를 제고하고, 당직자의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2일 오후 7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1강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27일까지 8주간 이뤄진다.

제1강에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정치도시 광주에서 과학기술 중심 국제도시 광주로’라는 주제로 강의한다. 함께 열리는 개강식에는 이달의 국민의힘 중앙연수

원장이 참석한다.

이외에도 △주대한 전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조정관 전남대 정치학과 교수 △최영대 사실과학네트워크 대표 △광주시 관계자 △김정현 광주시당위원장 및 김운 서구를 당협위원장 등이 강사로 참여한다.

김정현 시당위원장은 “정치대학을 통해 새로운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광주를 이끌 정치 역량을 키우고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열병차량에 탑승해 사열하며 지대지 미사일 현무-5 앞을 지나고 있다. **뉴스**

尹, 이번주 ‘쌍특검법’ 거부권 전망… 여야 충돌 불가피

야권, 수용 촉구 ‘천막농성’ 돌입
국힘 “똥똥 뭉쳐 폐기” 이탈표 단속
윤, 오늘 여당 상임위원장단 만찬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4일 ‘쌍특검법(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야의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권은 정부가 지난달 30일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 행사 건의안을 의결하자, 1일 국회 본청 앞에서 ‘김건희 특검 및 해병대원 특검 수용 촉구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재의결이 있을 4일까지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며 “농성 시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로 참여한 의원들은 야당에서 30여분 정도”라고 밝혔다.

이들은 “재의요구가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지 않았다”며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재의결에 들어가야하는데, 국민의힘은 더이상 국민의 입맛에 맞는 투표를 하지 말고 재의결에 찬성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책무라고 보고, ‘재표결부결’을 위한 단일대오에 나섰다.

4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이탈표 단속에 나서는 모양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의 악법

횡포를 막아내는 것은 여당의 책무”라며 “재의하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시 한번 하나로 똥똥 뭉쳐 폐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추경호 원내대표와 여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6명)·간사단(17명)과 만찬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독대를 재차 요구하고 있는 한동훈 대표를 제외하고, 원내 지도부·상임위원장과 따로 만나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인 윤 대통령이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당정 결속을 겸한 표 단속에 직접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김선욱 기자**

정치권, 이재명 위증교사 3년 구형에 ‘신경전’

여 “타당하고 상식적”
야 “괴벨스보다 악독”

여야는 지난달 30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극명하게 갈린 반응을 보이는 등 신경전이 한층 고조됐다.

국민의힘 송연훈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거짓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구형”이라며 “22년간 계속돼 온 거짓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엄정한 법의 심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위증교사 사건의 뿌리는 2002년 이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이라며 “이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의 잘못을 깨닫다면서

검사 사칭이라는 거짓을 동원했다.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아 ‘누명을 썼다’는 거짓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 거짓 주장으로 인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재판을 받게 되자, 이대표는 같은 해 12월부터 경기도지사의 권력을 등에 업고 증인에게 거짓을 말하도록 위증을 교사했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비열한 정치보복이자 대선 후보 등록을 막기 위한 치졸한 공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마의 편집으로 공소장을 조작한 정치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며 “검찰의 주장과 달리 (사

건 녹취록) 대화 내용 어디에도 위증교사는 없다. 그런데 검찰은 일부분만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맥락을 왜곡하여 공소장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검찰을 향해 “독일 나치의 괴벨스보다 더 악독한 괴물”이라며 “이 대표가 아니라 검찰이야말로 증언을 오염시키고 모해위증을 일삼으며, 범죄자들과 형량을 거래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위증 혐의를 인정한 반면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곡성·영광군수 재선거’ 선거정보 Q&A

- Q. 선거운동기간은 언제인가요?
A. 선거운동기간은 10월3일 목요일부터 10월15일 화요일까지입니다.
- Q. 사전투표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사전투표기간은 10월11일 금요일부터 10월12일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사전투표소는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되며, 선거인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Q. 선거일은 언제인가요?
A. 선거일은 10월16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투표소 현황 등 선거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 제공**